

## 신자유주의와 그 라이벌의 등장

### 1교시) 신자유주의의 전사 2 : 케인스주의 시대 깊이 읽기

#### ○ 전후 미국 주도 자본주의 질서 등장의 의의

좌파 정치의 구조적 위기를 해결한 것은 2차 대전 후 등장한 새로운 지구 질서였다. 미국이 영국을 대신해 지구 자본주의의 헤게모니 국가로 떠올랐다. 미국 내에서는 뉴딜 개혁과 전쟁을 거치면서 지배 세력들 사이에 새로운 합의가 형성됐다. 그 핵심은 이제 화폐 자본 대신 생산 자본이 자본 진영 내에서 헤게모니를 행사한다는 것이었다. 대량 생산 방식을 선택한 산업 자본과 금융 규제를 받아들인 은행 자본, 국가기구가 서로 동맹을 맺었고, 이들이 다시 조직 노동과 타협했다.

#### ○ 브레턴우즈 체제의 등장

미국 내의 이러한 합의가 전후 지구 자본주의의 규범이 되었다. 전후 질서는 새로운 국제 통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서 출발했다. 이것은 1944년에 열린 연합국 경제 회의의 이름을 따서 '브레턴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라 불렸다. 브레턴우즈 체제의 핵심은 금-달러 본위제에 바탕을 둔 고정환율제도였다. 달러는 금 1온스 당 35달러로 고정됐고, 다른 국가들의 통화는 달러에 고정됐다.

브레턴우즈 체제는 국민국가들에게 전쟁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경제 환경을 제공했다. 우선 금본위제 붕괴 이후 처음으로 만성적인 환율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제는 환율 위기 걱정 없이 경제를 꾸준히 성장시킬 수 있었다. 또한 국가 간 금융 흐름에는 울타리를 쳐서 국제 금융 활동이 정부 정책을 제약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 마디로 국민국가들이 자유롭게 경제 정책을 추진할 공간이 마련되었다.

○ 케인스주의 = 복지국가 = 민주적 자본주의 = 국민-대중 경제

이제 북반구 국민국가들은 일국 수준의 경제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 경제(national economy)'라는 일국적 경제 단위가 등장했고, 이 국민 경제를 조절할 거시 경제 정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거시 경제 정책의 중심 기조는 총수요 관리 중심의 경기 조절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일국 단위의 거시 경제 지표들(성장률, 실업률, 국제수지 등)이 정책 결정의 주된 기준으로 부상했다. 국가는 복지 지출을 늘려서 가계 소득을 보조했고, 불황 시에는 이것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했다. 제한된 규모이기는 하지만 국가가 소유·운영하는 공공부문이 등장해 정책 수단 중 하나가 되었다(혼합 경제). 이러한 정책 기조는, 공적 투자로 유효 수요를 늘려서 불황에 맞서자고 주장한 경제학자 J. M. 케인스(John Maynard Keynes)의 이름을 따 '케인스주의(Keynesianism)'라 불렸다.

국민국가는 드디어 보통선거에 기반한 대중 민주주의를 지탱할 경제적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케인스주의적 거시 경제 정책이 관철되는 공간, 즉 '국민 경제'가 그것이었다. 하지만 '국민 경제'라는 말은 그 역사적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주지 못한다. 양차 대전 사이의 가장 중요한 마르크스주의 사상가였던 A. 그람시(Antonio Gramsci)는 근대 국민국가 건설에서 '국민-대중[적인 것](the national-popular)'의 창출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럴 때에만 피 지배 대중의 동의를 얻는 헤게모니적 지배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 '국민-대중' 개념은 우리의 논의에도 풍부한 시사를 던져준다. 2차 대전 후 국민국가는 경제 활동들을 '국민-대중'적으로 조직함으로써 헤게모니를 구축했다. 국민 경제를 관통하는 정책 수단들을 통해 대중의 경제적 욕구를 일정하게 충족시킨 것이다. 즉, '국민-대중' 경제(national-popular economy)가 국민국가의 경제적 토대로 등장했다. 이제야 비로소 국민국가는 대중 민주주의라는 상부구조와 국민-대중 경제라는 토대를 함께 구비한 '역사적 블록(historic bloc)'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

## ○ 좌파 정치의 제1차 구조적 위기의 일정한 극복

이 달라진 지형에서 좌파 정치는 과거의 구조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국민-대중 경제 건설이 곧 좌파의 현실 목표가 되었다. 좌파 정당들은 케인스주의 거시 경제 정책을 통해 지지자들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었다. 물론 이 시기에는 우파 정당들도 국민-대중 경제 건설에 이의가 없었다. 그래서 전후 북반구 국민국가들의 정치는 좌파와 우파가 서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였다. 국민-대중 경제의 건설과 유지라는 정책 합의가 대다수 정치 세력들을 중도화하는 정치적 중심 지대(the Center) 역할을 했다.

## 2교시) 신자유주의에는 숙명의 라이벌이 있었다 : 구조개혁 좌파

### ○ 전후 질서의 모순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전후의 성공에 잠재해 있던 모순들이 지표면 밑에서 마그마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첫째, 국민-대중 경제의 성공 자체가 국민국가 내 계급 세력 관계에 초래한 긴장이었다. 30년 호황을 거치면서 자본의 힘도 막강해졌고 노동의 힘도 강화됐다. 이로 인해 자본과 노동 사이의 긴장이 높아졌다.

둘째는 국민-대중 경제의 성공이 가리고 있던 생활 세계의 새로운 열망과 불만들이었다. 대중은 길으로는 임금의 지속적인 상승과 복지국가에 만족하는 듯 보였다. 소비 사회가 이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주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었다. 많은 이들이 풍요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소비 사회 자체에서도 억압을 발견했다.

셋째는 국민-대중 경제의 번영을 뒷받침하고 있던 지구 질서의 모순과 변화 가능성이었다. 전후 시대는 일국 케인스주의(one nation Keynesianism)의 전성기였다. 그런데 이것은 브레턴우즈 체제라는 특정한 지구 정치 경제 질서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이다. 즉, 일국 케인스주의는 처음부터 초국적 케인스주의(transnational Keynesianism)를 전제한 것이었다. 하지만 브레턴우즈 체제는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었다. 우선 남반구에서 새로 막 등장한 국민국가들은 북반구 국민국가들만큼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이들의 불만과 원성이 이 체제의 정당성을 의문에 붙였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위협이 될 수도 있었다. 또 다른 모순은 브

레턴우즈 체제가 헤게모니 국가인 미국의 부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였다. 만약 미국이 자국의 정치 경제 상황 때문에 더 이상 이 짐을 지려 하지 않는다면, 브레턴우즈 체제는 곧 바로 붕괴할 수 있었다.

#### ○ 구조개혁 좌파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s)’ — 이것은 이탈리아 공산당을 중심으로 발전한 전략 구상이었다. 이 전략은 보통선거에 기반한 대중 민주주의가 등장하고 나서 변화한 현실을 인정했다. 좌파 정치도 이 형식적 민주주의 틀을 존중하면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틀 안에 갇혀서 자본주의의 부분적 개혁들만을 추구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자본주의 구조 자체에 손을 대는 개혁들을 시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구조개혁’ 노선이었다. 그러자면 현실 제도 정치에 거점을 마련하되 이 진지를 끊임없이 사회 곳곳의 또 다른 진지들, 즉 대중운동과 연결시켜야 한다. 두치케가 말한 “제도를 통한 대장정”도 다름 아닌 이러한 전망을 제시한 것이었다. 달리 말하면, ‘[체제] 안에서 [체제에] 맞서서(in and against)’ 싸운다는 접근법이였다.

#### ○ 스웨덴 사회민주당 이론가 비그포르스의 구조개혁 전략

비그포르스는, 위에서 본 것처럼, ‘케인스주의’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전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케인스주의 정책을 집행한 재무장관이 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의 목표는 단순한 불황 극복 그 너머에 있었다. 1919년에 그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한 「예테보리 강령 초안」을 당대회에 제출한 바 있었다. 그 3대 원칙이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자본주의 아래서 노동계급의 당면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사회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기본 정책 목표다. 둘째,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은 부의 공평 분배를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셋째, 생산과 분배에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대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 강령 초안 자체는 당대회에서 채택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당면 개혁 정책’과 ‘대안 사회 건설’을 서로 연결시키려는 구조개혁의 비전을 확인할 수 있

다. 이후에도 비그포르스는 이런 비전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자본주의 자체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 프랑스 좌파 이론가 앙드레 고르의 구조개혁 전략

- 공장 수준: 노동자들이 노동 조직과 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장악한다.
- 기업 수준: 노동자들이 이윤율, 투자의 규모 및 방향, 기술 수준과 개발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한다.
- 산업 및 부문 수준: 미래의 위기를 내장한 과잉 생산에 맞서 투쟁한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생산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자본주의의 약점에 맞서 투쟁한다. 이 투쟁은 산업의 방향을 재설정하거나 전환하는 프로그램과 연결된다.
- 도시 수준: 지역 사회의 생활 일체(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에 대한, 공공 교통, 부동산과 주거, 시 행정, 여가의 조직 등등에 대한 독점 자본의 권력 거점에 맞서 투쟁한다.
- 광역 수준: 지역의 생존과 균형, 가시적 혹은 비가시적 실업의 흡수, 위기를 겪거나 사멸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 등에 필요한 새로운 산업을 위해 투쟁한다. 이러한 투쟁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민도 참여시켜야 하며, 대안적인 지역 발전 프로그램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노동조합과 노동자 정당들이 함께 작성해야 하며, 독점 자본과 중앙집권적 정부 모두로부터 독립된 지역 차원의 정책 결정 구심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 국가 계획 수준, 즉 사회 전체 수준: 국가와 독점 자본주의가 설정한 방향을 변경하는 대안적 계획을 짜야 한다. 이 대안적 계획은 사회적 필요에 우선권을 둔다. 그리고 인적 자원(교육, 연구, 보건, 공공 시설, 도시 계획)과 국가의 물적 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사적 축적과 '소비(자) 사회'라는 목적에 도전한다.

#### ○ 반대편에서 신자본주의의 우파의 등장

그러나 역사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게 이들만은 아니었다. 구조개혁 좌파의 정반대 쪽에서도 전후 30년 역사를 비판하며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고자 염원하는 세력이 있었다. 이들

은 오늘날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이념을 준비하고 퍼뜨려온 무리들, 즉 시장자유주의의 전위 투사들이었다.

1947년 4월에 하이에크가 이들 전 세계(사실은 서구)의 열성분자들을 스위스의 한 휴양지에 불러 모았다. 쟁쟁한 인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이 회의를 상설 조직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첫 회의 개최 장소의 이름을 딴 이 조직의 명칭은 '몽펠랭협회(Mont Pelerin Society)였다.

몽펠랭의 시장자유주의자들은 산에서 내려와 곧바로 전투에 착수했다. 이들은 당연하게도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지형에서 작전을 시작했다. 그 지형은 물론 국민국가의 정치는 아니었다. 전후 30여 년간은 보수주의 정당도, 자유주의 정당도 중도화된 상태였다. 이런 대중정당에 참여하여 당의 방향을 바꾸는 지루한 싸움을 감수하기에는 이들은 너무도 전위적이었다. 이들은 대서양 양안 여러 나라(미국과 서유럽)의 거대 기업, 거대 은행, 국가기구 등의 최상층부를 연결하는 초국적 네트워크에 파고들었다. 특히 천성적 국제주의자들인 은행가들이 가장 손쉬운 포섭 대상이자 열성 분자들이었다.

시장자유주의자들은 초국적 엘리트 네트워크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싱크탱크들을 만들었다. 싱크탱크는 대중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정치권 상층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쓸모 있는 진지였다. 저잣거리를 걷기보다는 창공을 질주하기를 즐기는 이들의 스타일에 딱 맞는 수단이었다.

말하자면, 전투는 1970년대에 시작된 게 아니었다. 단지 이때부터 시장자유주의 쪽의 공세가 두드러지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이 과정에서 시장자유주의 진영 안에서도 특정한 흐름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프리드먼을 중심으로 한 시카고 학파의 통화주의였다. 통화주의는 케인스주의의 약점인 인플레이션 문제를 집중 비판했기 때문에 케인스주의로부터 왕관을 벗겨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었다. 또한 통화 가치 안정을 최우선에 놓는 이론이었기 때문에 당시 막 자본 진영의 총아로 떠오르기 시작하던 화폐 자본으로부터 각광을 받을 수도 있었다. 통화주의를 선봉장으로 내세운 신자유주의의 초기 진용이 갖춰진 셈이었다.